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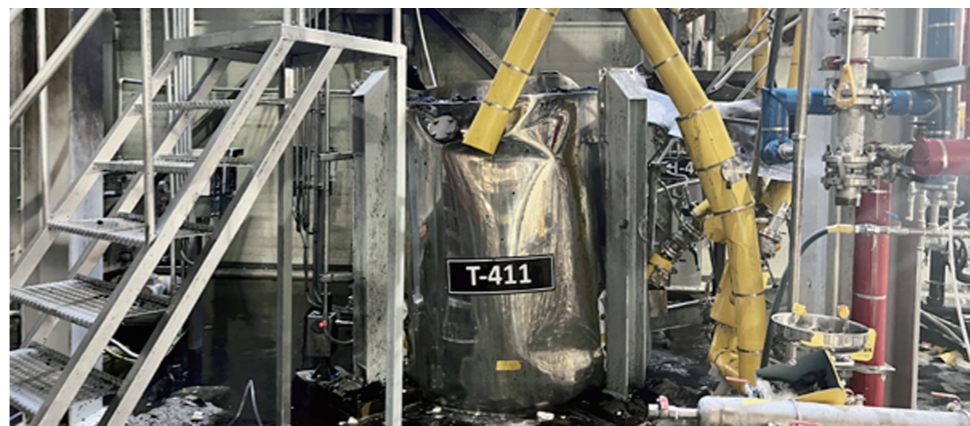
다시 증가하는 가스 안전사고...엔데믹에 전년比 26% ↑

5년 간 사고 줄더니...인명피해 2년 만에 26% ↑
사고 40% '취급 부주의...봄철 나들이 주의해야'

최근 5년 꾸준히 줄어든던 가스 안전 사고가 지난해 다시 약 20% 늘어났다. 코로나 19 엔데믹 이후 외부활동이 늘어나면서 가스 사고도 다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는 총 92건이다. 지난 2022년(73건) 대비 약 26.02% 증가했다. 최근 5년 가스 안전사고는 매년 감소해왔다. 지난 2018년 121건에서 2020년(98건) 100건 밑으로 줄어든 뒤 2022년 73건까지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두자리 수 증가율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인명피해 규모도 다시 불어났다. 지난 2018년 98명에서 2021년 65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79명)에 이어 82명이 됐다.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약 26.15% 늘었다.

LPG(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연료별 사고 건수는 LPG가 45건으로 전체 사고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 밖에 고압가스 및 이동식부탄연소기 사고가 각 16건, 도시가스 15건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보다 사고가 다시 늘어난 배경으로는 엔데믹이 꼽힌다. 지난 2021~2022년 코로나19로 비대면 등이 늘어나면서 가스사고 빈도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2023년 엔데믹으로 외부활동이 늘어나면서 사고도 덩달아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시기 때보다 지난해 사고 장소로는 식품접객업소(17건)와 허가업소(13건) 등에서 소폭 더 발생했다. 결국 가스안전 사고가 최근 감소한 것은 안전이 강화됐기 때문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란 지적도 나온다.봄철에는 바깥 활동이 늘어나고 가을철부터 가스 사용이 빈번해지는 만큼, 미리 안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고의 대부분이 사용자 부주의에서 불거졌다. 지난해 사고(92건)의 약 40%에 달하는 39건이 취급 부주의로 조사됐다. 사용자 부주의로 25건, 공급자 부주의로 24건 발생했다. 시설이 미비하거나 제품이 노후한 이유로 발생한 사고는 각각 18건, 16건에 그쳤다. 지난해 인명 피해가 가장 컸던 사고는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다. 낚시터 텐트 안에서 가스난방기를 사용하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2명이 숨졌다. 지난해 12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에 있던 도시가스 보일러에서 발생한 폐가스가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에는 제주에서 고압사고로 1명



이 숨졌다. 체험마을에서 공기충전 중 충전구에서 가스가 누출됐다. 이 밖에 LPG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도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24일 대전 대덕구의 상가 건물이 누출된 가스가 폭발하면서 붕괴됐다. 이에 6명이 부상을 당했다. 가스안전공사는 부탄캔을 사용할 때는 물론 보관 시에도 주의를 부탁했다. 공사는 부탄캔을 직접 가열하거나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화기가 느껴질 정도로 가까운 곳에 보관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동식 부탄연소기를 2대 이상 병렬로 연결하는 것도 금지했다. 음식점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려면 부탄캔을 사용한 뒤 연소기에서 반드시 분리하고, 이를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을 강조했다. CO 위험에서는 중독 증상을 즉시 파악하고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연소기 설치 시 환기구를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서선욱기자



임시공휴일에 즐기는 나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자 임시공휴일인 10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광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7곳 적발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도 부과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광주지역 업체 7곳이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광주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7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대기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사례 3건과 대기방지시설 기계·기구류 훼손·방치, 대기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이 중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3건은 광주시

사회재난과(민생사범수사팀)가 수사를 진행한다. 기타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오숙 광주시 환경보전과장은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민관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4곳에 대해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변용일기자

술자리 동석 지인 흉기 살해 50대 구속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술자리를 함께 한 선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고흥군 모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씨는 앞서 지난 3일 오전 지역 내 장터 주차장에서 행인에 의해 이미 숨진 상태로

뒤늦게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숨진 B씨의 행적을 추적, 숨지기 직전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붙잡았다. 검거된 A씨는 정확한 범행 시점·장소와 동기 등에 대해서 일체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조만간 송치할 방침이다. 고흥=기동채본부

보증금 반환 안하고 점유권 편취...대법 "사기죄는 아냐"

1~2심 유죄...대법서 파기환송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세입자의 주거지 점유권을 편취했다고 해도 사기죄에서 정의하는 재산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전세 보증금은 1억2000만원이었고, 계약기간은 2년이었다. 이후 A씨와 B씨는 계약 기간 2년 연장예 합의한 뒤 2020년 8월 계약해지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B씨는 2020년 9월 오전 오피스텔에서 짐을 모두 뺀 뒤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A씨는 '1일 이체 한도가 5000만원이어서 오늘 5000만원을 송금한 뒤 나머지 7000만원은 은행에 가서 송금하겠다. 대신 다른 계약자가 오늘 들어오기로 했으니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공인중개사에게 알려주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B씨는 잔금을 받지 못한 채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새로운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로 이사해 왔다. 검찰은 A씨가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씨를 기망해 B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 점유권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를 적용했다. 이 외 A씨는 약 30명에 달하는 피해자에게 32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약 피해자 B씨가 자신의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을 알았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 A씨에게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며 "따라서 A씨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피스텔 점유권을 편취한 A씨 행위의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슬비기자

대법원은 2012년 '채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라 "피해자 B씨가 추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말에 속아 보증금을 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A씨에게 이전했다"고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B씨가 돌려받지 못한 잔액 5000만원이 아닌, A씨 소유 오피스텔에 대한 '점유권' 자체를 두고 다툰 이 사건에서 B씨가 잃은 점유권을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피해자 B씨의 오피스텔에 대한 점유권을 편취했다는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중 피해자 B씨에 대한 사기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결합된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슬비기자

아버지 흉기 찔른 고교생 긴급체포

얼굴·배 등 흉기에 찔려, 생명에는 지장 없어

말다툼 도중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검거됐다. 나주경찰서는 10일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준속중상해)로 고등학생 A(17)군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전날 오후 8시10분께 전남 나주시 소재 자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얼굴·배 등을 흉기에 찔린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나주=송준표기자

경찰은 범행 직후 흉기에 찔린 채 스스로 파출소를 찾았으나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아버지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났기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 나주=송준표기자

담양서 배터리 충전하던 캠핑 차에 불

10일 오전 9시 18분께 전남 담양군 봉산면 주택 마당에 주차된 캠핑차량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7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내부가

타고 그을렸다. 경찰은 캠핑용 배터리 과충전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담양=박종영기자